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. 6. 17.(수)

정부,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론화 착수

- 참정권 침해에 대해 근본적 문제제기에 앞장선 청년·대학생들과 우선 대화
- 윤창렬 국무조정실장, “청년과의 토론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공론화 적극 추진”

- 국무조정실(실장 윤창렬)은 6월 17일(수) 10시,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‘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청년·전문가 토론회’를 개최했다.
 - * (참석) 국무조정실장(주재), 전현직총학생회연합 및 전국총학생회협의회, 대학 총학생회 관계자,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, 대학 교수 등 전문가, 법무부·행안부·교육부 등 관계부처
- 이번 토론회는 지난 6.7일 국무총리 주재 대학생 간담회와 6.11일 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서, 최근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등에 대한 청년·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.
 -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논의한 후, 재발 방지를 위한 선관위의 조직 개혁방안, 내·외부 감시·관리 강화방안 등에 대해 집중 토론하였다.
 - 특히, 대학생들은 법률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방안들이 있는지 더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, 향후 사태의 진행상황에 대해 정부에서 계속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.
-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“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오늘 청년들과의 토론을 시작으로 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공론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	문유진 (044-200-1981)
	청년정책협력관실	담당자	사무관	박성희 (044-200-1985)